

국가예산확보 국회 지도부 공략

송하진 도지사, 문희상 국회의장·홍영표 민주 원내대표 정동영 평화당 대표 등 찾아 핵심사업 예산 반영 요청

전북도는 상임위 심사를 대부분 마치고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심사만을 남겨 둔 상황에서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다.

송하진 도지사는 19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 더불어민주당·민정당 대표, 더민주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예결위위원장, 정운천의원 등 여야 핵심 지도부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2019년도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국가예산 활동에서는 국회의장, 더민주당·민정당 대표, 예결위위원장 등에게 핵심사업 2~3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단계에서 반영 되도록 순차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게는 전주 완주 혁신도시 악취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김제 용지 축사밀집지역 매입 지원과 주민 교통 불편해소와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인계~쌍치(밤재터널)구간 국도 21호선 시설 개량사업과 노령산 맥골 휴양치유벨트 조성 등 6개 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예결소위 위원이 유력시되는 정운천 의원을 방문해서는 상임위 증액 의결에 대한 방어 활동, 과소 미반영 및 부정적 사업에 대해 예결위 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부탁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을 만나서는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으로 입주 희망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가 추가 확보와 민간육종 연구단지 중심 국내 종자 산업 활성화를 통해 2022년까지 종자 수출 2억 불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 시설인 종자기업 공동활용종합공정시설 구축 사업 반영을 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을 통해서 2023년 세계잼버리 행사이후에 국제 청소년 메카로 자리잡기 위해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비 반영과 전라권 미래 천년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광역관광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 수립에 필요한 국비 반영을 부탁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는 새만금 신항만 1단계사업을 2023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기 위해서 부두시설 설계비 반영과 2023년 세계잼버리 참가자 이동수단인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등 새만금 SOC 조기구축사업과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반영 등을 핵심사업으로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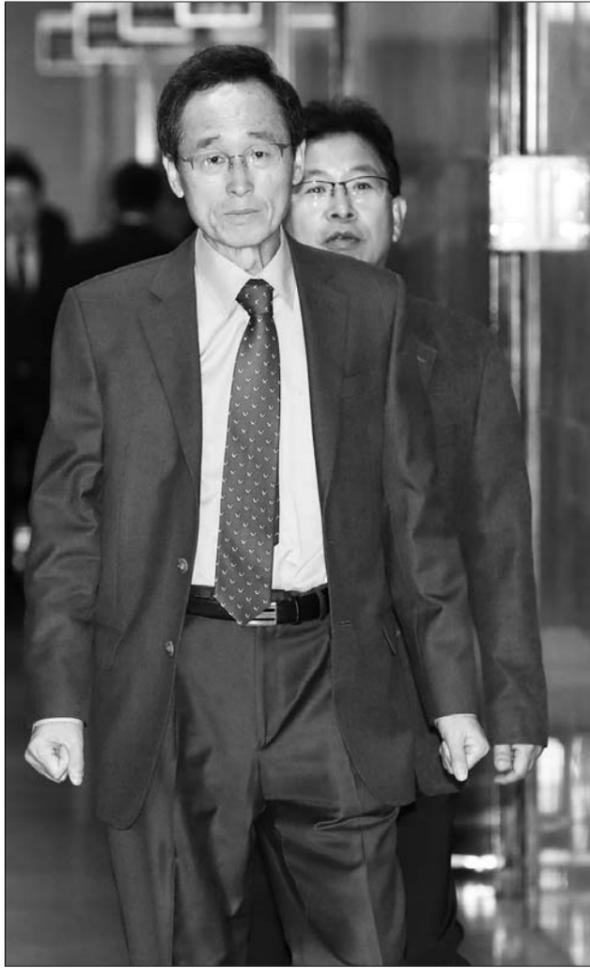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서는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확보를 거듭 요청하였고, 2023년 스마트 캠퍼스를 통한 VR/AR 기술의 세계화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과 국가 사업임에도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비 및 운영비 전액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통해서서는 우리도를 4차 산업혁명의 블루오션인 고부가가치 해양무인시스템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소형해양무인시스템 플랫폼 구축사업 에타 대응 용역비와 해양관광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광역해양레저단지 조성비와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 사업 등 6개 사업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송 지사는 예타면제와 관련하여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상용차 산업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과 동서화합차원에서 추진중인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기반 구축사업 선정을 통한 예타면제를 건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종 예산 확정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상 최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고,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증액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를 예방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정동영 민주 평화당 대표를 만나기 위해 민주평화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도내 기초단체장 전북도-중앙부처 건의 안전 논의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3차 회의 진안서 개최

진안군은 19일 민선7기 1차년도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회의의 운영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황숙주 협의회장(순창군수) 주재로 이항로 군수의 환영사에서 이어 주요 안전도의,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사항을 전달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정부 지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 '회귀질 환자 의료지 지원사업' 등 전라북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할 안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지방 자치분권 확대 등을 위해 시장·군수들이 상생발전 방안과 공동 문제를 협의하고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한 협의체로 2개월에 한 번씩

시군을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환영사에서 "진안군에서 전북시장·군수협의회를 갖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진안군과 각 시군, 전북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발전적인 방안과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재판개입, 징계 뿐만 아니라 탄핵도”

법관 대표들, 회의를 의견서 채택

전국 법관대표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발의해 정식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법관대표들은 의견서에서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수렴한 의견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법관 탄핵 관련 안건은 오후 회의 첫 순서로 논의됐다. 당초 법관 탄핵 안건은 정식 안건으로 선정된 8건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10인 이상 동의를 있을 경우 안건에 대한 현장 발의가 가능하다는 회의 규정에 근거, 공식적인 논의석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현재 법관 탄핵 문제를 두고서는 대표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크게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인사에 있어 부끄럼 없다”

김승환 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재판 결과에 “모든 공직자들에게 심각한 모멸감을 안겨다줬다” 직원들에 “자책 말라” 강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16일 재판 결과에 대해 “치욕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1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번 판결은 전북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심각한 모멸감을 안겨줬다”면서 “지금까지 교육감 직을 수행하면서 인사와 관련해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절차를 밟아왔다는 뜻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이 왜 인사문제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다

룩 일을 했겠느냐. 그것은 전북교육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교육감에게 충성하지 말고, 전북도민에게, 전북교육에, 우리 아이들에게 충성하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막대한 힘을 가진 사람들의 청탁이 없었겠느냐?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 전북교육이 어떻게 됐겠느냐?”면서 “בללל 교육감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공직자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간부님들 비롯해 전북교육청 모든 공직자들께서 조금이라도 자책하지 마시라”면서 “전북교육 인사행정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다.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文대통령 “식민지 시대, 한일에 이룬 과거... 진실과 마주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일 양국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운다면 마음을 터놓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제54회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의 서면 축사를 통해 “두 나라의 오랜 우호 협력의 역사 속에는 불행한 시간도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식민지 시대는 한일 모두가 이룬 과거다. 그러나 아프다고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한일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는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일한 협력위원회는 두 나라 간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69년 발족한 민간기구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